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6월 14일(금) 11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통상정책총괄과 박태성 과장, 권혁우 서기관, 전동욱 사무관(2110-5284)

『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』 발표

- '통상교섭' 중심에서 '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'로 전환 -

< 발표대책 핵심 골자 >

◇ 개방형 통상정책 기조 하에 FTA네트워크를 확대
- **한중 FTA 추진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핵심축(linchpin) 역할 수행**
- **동시에 신흥국, 자원부국과 상생형 FTA 추진**
- **FTA 체결과 연계한 보완대책을 강화하고 對국민 FTA체감효과 제고**

◇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력 추진
- **산업협력, FTA협력, 자원협력, 특화협력군 등으로 구분**
- **신흥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흥국 진출 강화**

◇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 추진
- **비관세장벽 대책본부 구성 등을 통해 기업 해외진출 애로의 실질적인 해소**
- **청년·퇴직인력 pairing 시스템 확산 등 인력 해외진출 사업 확대**

◇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- **산업계, 전문가, 국회와 소통하는 '통상 협업 커뮤니티' 구축**
- **제조업·서비스업·농수산업 등 전산업계가 참여하는 '통상산업포럼' 운영**
- **'통상추진위원회'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업을 강화**
- **기업 맞춤형 통상정보를 one-stop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**

□ 정부는 6.14일(금) 조직 개편을 계기로 **통상교섭-이행-국내대책이 단일 창구(single window)로 통합**됨에 따라 통상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한 「**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**」**을 발표하였음**

* 6.13(목) 대외경제장관회의(경제부총리 주재)에서 정부안 의결, 6.14(금) 국회 보고

○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**▲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, ▲산업·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, ▲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, ▲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** 등 4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,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

【추진배경】

□ **통상교섭-이행-국내대책이 단일 창구로 통합됨**에 따라 통상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

○ 산업계와의 소통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높일 필요

* 그간 통상정책은 △동시다발적 FTA를 통해 FTA hub를 구축하고, △성공적인 산업자원협력 사례(인도네시아, 베트남)를 발굴했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,

  - 실질적인 실효성보다는 FTA 교섭성과 위주의 분절적 통상정책이라는 점과 국민·산업계와의 소통이 다소 미흡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상존

□ 한편,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**대내외 통상여건이 급변하고 있어,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**한 상황

○ 대외적으로는 선진 경제권간의 FTA,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을 둘러싼 미-중간의 주도권 경쟁 및 신흥국의 급부상 등 불확실성이 고조

* 미-EU FTA, 미국 주도의 TPP, 중국 및 아세안 주도의 RCEP 등 본격화되는 반면, WTO 다자통상체제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위기감은 고조

○ 대내적으로는 대기업·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의 유효성이 저하* 되면서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음

* 수출의 고용기여도 지속 감소: 고용유발계수(명/10억원) ('00) 10.9→ ('05) 8.0→ ('10) 5.9

【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】

□ FTA협상 추진 등 지금까지의 개방형 통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, 통상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업·소통 체계를 보다 보강하여 산업과 통상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할 것임

〈 목표: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상생형 통상국가 〉

정책기조: ① 개방형 통상정책의 기조 유지 ② 상대국과 상생(Win-win)하는 통상전략 수립 ③ 통상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 시스템 구축 ④ 협업·소통의 통상정책 기반 확충

	그간의 통상정책 전략	新통상정책 전략
추진전략	**FTA 교섭중심의 통상**	**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통상**
통상교섭	· FTA Hub 구축	· 지역통합의 중심 핵심축(linchpin)
통상협력	· 거대경제권 위주	· 신흥국 맞춤형 통상협력모델 개발
성과공유	· FTA 효과의 체감도 저하	· 통상정책의 실효성 제고(일자리·중소기업)
추진방식	· 분절적 통상추진체계	· 통상교섭-이행-대책 일원화
	· 정부주도	· 민관 협업과 소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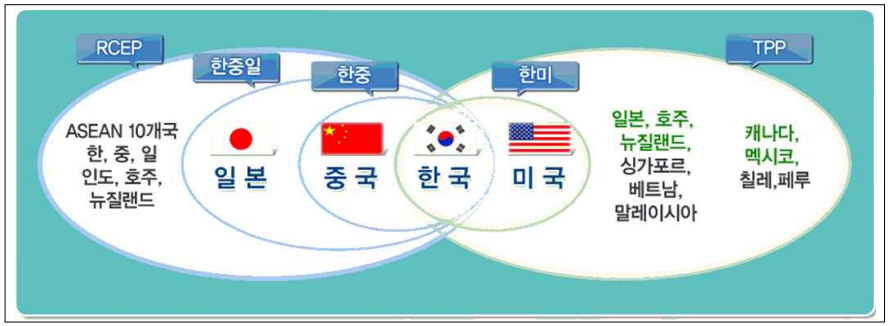
【추진과제 1 :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】

1-1 지역통합 주도를 위한 FTA 추진

□ **(기본 전략)** 기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미국 주도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**핵심축(linchpin) 역할**을 도모할 것임

○ 한·중 FTA, 한·중·일 FTA 및 RCEP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통합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

<아-태지역 경제통합과 우리의 역할>



□ **(한·중 FTA)**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접근성 제고와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완결하고, 동아시아 지역통합논의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

□ **(동아시아 경제통합)** 한·미, 한·중 FTA를 기반으로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RCEP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

1-2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

□ 신흥국의 개발, 협력수요에 부응하면서 산업, 자원, 에너지 협력 등과의 연계를 통한 win-win 방식의 FTA 추진할 것이며,

○ 특히 ASEAN의 핵심국가이며 우리 기업 진출, 수출 확대 필요성이 큰 **인니·베트남과의 FTA 협상을 적극 추진**할 것임

* 한·중, 한·인니, 한·베트남 FTA / 한·중·일 FTA / RCEP 타결시 우리의 FTA 무역비중은 35%('13)에서 69%('17)로 증가 전망

1-3 WTO 다자협상 적극 대응

□ **(WTO 쌀 관세화)** 우리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'14.12.31일자로 만료 예정*인 바, **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쌀 관세화 정부 방침 결정**

*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 '95~'04년 간 쌀 관세화유예를 확보, '04년 유예기간을 '14년까지 추가연장

□ **(복수국간 협상)** 현재 WTO 일부 회원국들간 진행 중인 **복수국간서비스협정(TISA) 협상, 정보기술협정(ITA) 품목확대협상**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우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확대할 것임

* TISA(Trade in Service Agreement), ITA(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)

□ **(DDA 협상)** '13.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(MC9) 계기, DDA 협상 중 합의 가능한 일부 분야*에서 조기수확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참여 중임

* 무역원활화, 농업 일부, 개발/LDC(최빈개도국)

【추진과제 2 : 산업·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】

□ **(맞춤형 통상협력)** 국가별 진출여건 및 기업수요를 감안, **유형별(산업협력,FTA협력,자원협력,특화협력군)로 분류하여 맞춤형 통상협력**을 적극 추진할 것임

○ 美·EU·中·日 등 거대경제권과는 FTA 중심으로 협력하고, 인니·베트남 등 신흥개도국은 산업발전협력+FTA형 협력을 중점 추진

○ 우즈벡·모잠비크 등 신흥자원부국과는 자원·에너지 확보협력에 초점을 맞추고, 러시아 등 기술우위국과는 원천기술 확보 및 자원확보를 병행 추진

□ **(신흥국 맞춤형 지원)** 신흥국 공동발전 프로그램(ECP)* 마련, 플랜트 펀드 조성 및 다자개발은행과 프로젝트 금융협력, 신흥국에 적정기술 지원을 통한 상생형 기술협력 등 산업자원협력 지원시스템을 정비하고 복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임

* ECP : Emerging nations Co-development Program

【추진과제 3 :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】

3-1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 추진

□ 통상을 통한 시장창출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·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내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출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강구할 것임

□ **(중소기업)**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, **문화·복지·CSR 등 사업간 결합 및 R&D·마케팅 등 기능간 연계**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모색하고, **해외진출 정보와 지원거점도 단일화(KBP)**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토록 할 것임

* (베트남) 콘텐츠 기업과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결합한 전시회 개최('13.11월)
* (터키) 세계일류상품전과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연계 개최('13.8~9월)

○ 아울러, 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**산업부내에 '비관세장벽 대책본부(본부장: 차관보)'를 금년 하반기에 구성**하여 외국의 기술장벽·지재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함

□ **(일자리)** 의료·전자정부·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, **청년·퇴직인력 Pairing 시스템 확산 등을 통해 인력 해외진출 사업도 확대** 예정임

* '제품+서비스' 복합사업모델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, 해외환자유치 패키지 지원 등

3-2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

□ 한·중 FTA 등으로 예상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**FTA 체결과 연계한 보완대책 내용·구성 및 체계로의 개편**을 추진하고, **「FTA 활용촉진 협의회」***를 통해 FTA 활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, **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중심의 One-Stop 서비스**도 강화할 것임

* 산업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급(12명) 및 유관기관 부기관장(12명)이 참여

□ 한-미, 한-EU FTA 국내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**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***도 금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임

* 중진공 지역지부, 지방노동청 등을 활용한 지방 중소기업 대상 홍보 강화 등

【추진과제 4 :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】

□ 정부 3.0 기조에 따라 **산업계, 전문가,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·협업하는 '통상 협업 커뮤니티'를 구축**함으로서 통상정책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임

○ 금년 5월부터 제조업·농업·서비스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**'통상산업포럼'을 구성하여 통상 이슈에 대해 상시 소통**

* 산업부장관·무역협회장(공동위원장) 주재 하에 22개 분과를 구성, 협상에 대한 소통 강화, 미시적 영향평가, 실질적 국내대책 마련 등 논의

○ **통상절차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**하여, 對국회 의무보고 사항 외에도 주요 협상 추진상황,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며, **민간자문위원회 역시 국회추천인사 및 농어업·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편**할 것임

□ **「통상추진위원회*」를 중심으로 통상 관련 부처간 협업 체계를 구축**하고 통상기능 이관 취지에 따라 **재외공관의 통상관련 인력조정 등 통상부서와의 협업체제도 강화**할 예정임

* 산업부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 25명으로 구성하여 통상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, 주요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·의결은 대경장에 요청

□ 각 기관별로 **분산된 통상정보를 체계화**하여 중소·중견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**one-stop으로 제공**할 것임

* 해외진출 무역정보와도 연계하여 해외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

** (例示) 통상동향, 협상 추진동향, FTA 보완대책, 수입규제동향, 주요 프로젝트 동향 등

□ 최경림 차관보는 "정부는 이번 대책을 토대로 향후 주요 통상정책 수립시 국회, 업계, 학계 등 **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**"이라고 밝히며, 관련 정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함

<별첨> 『새 정부의 新통상 로드맵』 1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권혁우 서기관 또는 전동욱 사무관(☎ 02-2110-52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